

금리 인상·투자 열풍에 ‘월세 대세’… 광주 임대차 비중 54%

오피스텔 매매·전세가격 하락 속 월세 0.45% 올라 전월세전환율 7.21%…2030 중심 유동성 확보 선호

금리 인상과 전세사기 여파, 최근 증시 활황이 맞물리면서 월세살이를 선택하는 임차인이 늘고 있다. 특히 주택 임대시장의 핵심 수요층인 20~30대를 중심으로 전세보증금에 목돈을 묶기보다 현금 유동성을 확보하려는 인식이 확산하면서 광주 임대차 시장도 빠르게 월세 중심으로 재편되는 모습이다.

9일 한국부동산원의 '2026년 2분기 오피스텔 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광주 오피

스텔 월세가격은 전 분기보다 0.45% 상승했다. 반면 매매가격은 0.55%, 전세가격은 0.23% 각각 하락했다. 매매와 전세는 약세를 이어가는 반면 월세시장만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며 임차 수요가 월세로 이동하는 양상을 보였다.

광주의 오피스텔 전월세전환율도 7.21%로 전국 평균(6.62%)을 웃돌았다. 전월세전환율은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할 때 적용하는 비율로, 수치가 높을수

록 월세 부담이 커진다는 의미다. 오피스텔 수익률 역시 6.91%로 전국 평균(5.80%)을 웃돌며 임대인들의 월세 선호를 뒷받침했다.

임대차 거래에서도 월세 중심의 변화는 뚜렷하다.

국토교통부 주택통계(확정일자 집계 기준)을 살펴보면 지난 6월 기준 광주지역 전체 주택 전·월세 거래 가운데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53.8%로, 전세(46.2%)를 넘어섰다. 과거 전세가 주를 이루던 임대차 시장이 월세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특히 청년층과 1인 가구의 수요가 많은 오피스텔은 월세 비중이 68.4%에 달해

10건 중 7건가량이 월세 거래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금리 인상과 전세시장 불안이 월세 선호를 키우는 가장 큰 요인으로 보고 있다.

최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전세자금대출 이자 부담이 커진 데다 2022년 이후 전국적으로 이어진 전세사기 사태가 전세 기피 현상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광주 아파트 전세가율은 78.6%로 전국 평균(71.2%)을 웃돌면서 보증금 미반환 위험 등에 대한 우려가 월세 선호를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지난해부터 이어지고 있는 증시 강세도 이러한 흐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자산 형성과 투자에 관심이 높은 20~30대를 중심으로 전세보증금으로 목돈을 묶어두기보다 월세를 선택해 여유자금을 확보하려는 경향이 짙다는 것이다.

광주 동구에서 직장생활을 하는 김세은씨(28)는 최근 전세 대신 월세를 계약했다. 김씨는 “처음에는 전세를 알아봤지만 대출이자를 계산해 보니 부담이 컸고, 전세사기 뉴스를 접하면서 불안감도 커졌다”며 “보증금을 최소화하고 남은 자금은 비상금으로 보유하거나 주식과 ETF에 투자하는 편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했다”

고 말했다.

이어 “매달 월세를 내는 부담은 있지만 목돈을 묶어두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라며 “주변에서도 전세보다 월세를 선택하는 친구들이 눈에 띄게 늘었다”고 덧붙였다.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금리 인상과 전세사기 여파가 맞물리면서 월세 선호 현상은 지역 임대차 시장의 대세가 됐다”며 “월세 거래 비중이 계속 확대되면 청년층은 물론 무주택 실수요자 전반의 주거비 부담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전세시장 안정과 실수요자 중심의 주거 지원 정책이 함께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김은지 기자 eunzy@gwangnam.co.kr



“자랑스러운 내고장 향토기업 찾습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10곳 모집…내달 4일까지 접수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지역에서 15년 이상 사업을 이어오며 고용 창출과 사회 공헌에 앞장선 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해 9월 4일까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자랑스러운 향토기업’을 모집한다.

신청 대상은 광주특별시 내 옛 전남지역에본사·주사무소·사업장 가운데 하나를 두고, 15년 이상 사업을 유지하면서 상시근로자 1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중소·중견기업이다.

평가는 경제적 기여(업력, 매출액 증가율 등)와 사회적 기여(사회 공헌, 직원 복지 등) 등 2개 분야 8개 항목을 기준으로 이뤄진다. 고득점 순으로 총 10개 기업을 선정한다.

최종 선정된 기업에는 향토기업 인증서와 현판을 수여한다.

또 중소기업 시설자금·경영안정자금 융자 한도 상향(시설자금 20억원, 경영안정자금 6억원), 이자 지원 우대(최대 2.5%), 국내외 박람회 참가 지

원, 홈쇼핑·인터넷 오픈마켓 입점 지원, 스마트공장 구축 등 각종 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시 차원의 기업 홍보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광주특별시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2026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자랑스러운 향토기업 모집’ 공고문을 확인하고,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중소벤처기업과 (061-286-3753)로 문의하면 된다.

김형성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중소벤처기업과장은 “지역에서 오랜 기간 자리 창출과 사회공헌을 실천한 기업은 지역경제를 지탱하는 소중한 자산이다”며 “우수 향토기업이 자금심을 갖고 계속 성장하도록 자금과 판로, 홍보 등 실질적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박정렬 기자 holbul@gwangnam.co.kr

비수도권 고용 회복세…취업자·고용률 동반 개선

제조·건설업 부진 속 서비스업 견인…청년 고용 선방

올해 상반기 비수도권 고용시장이 취업자 증가와 고용률 상승 등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과 건설업 부진이 이어졌지만 서비스업이 이를 상쇄하며 고용 증가를 이끌었고, 청년 고용도 감소세 속에서도 상대적으로 양호한 모습을 보였다.

9일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상반기 비수도권 취업자는 전년 동기보다 9만7000명 증가했다. 지난해 상반기 증가 폭(9만8000명)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며 증가세를 이어갔다. 반면 수도권은 취업자 증가 폭이 8만4000명에서 1만2000명으로 크게 둔화했다.

고용률도 비수도권이 개선됐다. 비수도

권 고용률은 62.6%로 0.2%p 상승했다. 반면 수도권은 62.4%로 0.4%p 하락했다. 지난해 상반기에는 수도권(62.8%)이 비수도권(62.4%)보다 높았지만 올해는 비수도권이 0.2%p 앞섰다.

고용의 질을 나타내는 상용근로자도 비수도권에서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비수도권 상용근로자는 13만1000명 늘어 증가 폭이 확대된 반면 수도권은 15만5000명 증가에서 3만7000명 감소로 전환됐다.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비수도권에서 3만8000명, 수도권에서 4만7000명 각각 증가했다.

산업별로는 서비스업이 비수도권 고용 증가를 견인했다. 사업·개인·공공서비스

및 기타 업종 취업자가 21만9000명 늘어 가장 큰 증가 폭을 기록했고, 전기·운수·통신·금융업도 4만5000명 증가했다.

반면 제조업과 건설업 부진은 이어졌다. 비수도권에서는 농림어업 취업자가 7만7000명 감소했고, 도소매·숙박음식점업은 3만8000명, 건설업은 3만1000명, 제조업은 2만5000명 각각 줄었다. 다만 서비스업의 증가세가 이를 상쇄하며 전체 취업자 증가를 이끈 것으로 분석된다.

청년 고용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지만 비수도권의 감소 폭은 수도권보다 작았다. 상반기 청년층 취업자는 18만6000명 감소했으며, 수도권은 15만6000명, 비수도권은 3만2000명 줄었다. 청년 고용률도 비수도권은 지난해와 같은 41.9%를 유지한 반면 수도권은 45.2%로 2.8%p 하락했다.

김은지 기자 eunzy@gwangnam.co.kr



고용노동부 장관-한국중견기업연합회 정책 간담회

김영춘 고용노동부 장관(앞줄 왼쪽 네 번째)이 최근 서울 마포구 삼성화재관에서 열린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정책 간담회에 참석, 관계자들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

홍남기

미소금융 상반기 1612억 공급 ‘역대 최대’

작년 대비 134억원 증가…자영업자·청년 지원 확대

서민금융진흥원이 올해 상반기 영세 자영업자와 청년, 금융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있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올해 상반기 미소금융 공급 실적이 1612억4000만원으로 집계됐다고 9일 밝혔다. 지난해 상반기 공급액 1478억5000만원 대비 134억원(9.1%) 증가한 규모다. 이윤 건수도 1만6359건으로 반기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 3월 미소금융 지원 확대를 위해 출시한 신규 상품도 안정적인 공급 흐름을 보였다. 청년 미래이음 대출은 114억원, 청년 운영자금 대출은 61억4000만원, 금융취약계층 생계자금은 89억8000만원이 공급됐다.

미소금융은 낮은 신용평점과 소득으로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영세 자영업자와 청년, 금융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데

표적인 정책 서민금융 상품이다.

현재 미소금융은 기업과 은행의 기부금으로 설립된 11개 미소금융재단과 일반 기부금, 서민금융진흥원의 휴면예금 운용 수익을 재원으로 전국 27개 지역법인을 통해 공급되고 있다.

금융권과 기업의 재원 확대도 이어졌다. 지난 3월 제3차 ‘포용적 금융 대전환’회의 이후 금융권과 기업은 미소금융 재원으로 총 7000억원 기부를 추가로 약속했다.

신한금융을 시작으로 우리금융, KB금융, 하나금융, NH금융이 각각 1000억원씩 총 5000억원 규모의 재원 기부를 발표했다. NH금융은 연내 NH미소금융재단 신규 설립도 추진한다. 삼성그룹도 지난 7월 영세 자영업자의 실질적인 자립 지원을 위해 2000억원 기부를 발표하며 추가 출연에 동참했다. 김은지 기자 eunzy@

NH농협생명, 폭염 대응…온열질환 보상

정부 정책보험 ‘농업인안전보험’ 지원

NH농협생명이 농작업 중 발생하는 온열질환을 보장하는 정부 정책보험 운영과 신속한 보험금 지급 체계를 통해 농업인 안전망을 강화한다.

NH농협생명은 정부 정책보험을 통해 농작업 중 발생하는 온열질환을 보장하고 신속한 보상과 예방 활동을 추진한다고 9

일 밝혔다.

농업인안전보험은 농작업 중 발생한 재해와 질병을 보장하는 정부 정책보험이다. 농작업 중 발생한 온열질환으로 입원하거나 사망한 경우 유족급여금과 장제비, 휴업급여금, 치료비 등을 보장한다. 보험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만 15세부터

87세까지의 농업인이 가입할 수 있으며, 전국 농·축협에서 연중 신청할 수 있다.

농협생명은 폭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2024년부터 혹서기마다 ‘온열질환 신속 보상 프로세스’를 운영하고 있다. 보험금 접수부터 심사, 지급까지 전 과정에 전담 심사자를 지정해 보상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있다.

또 온열질환 예방 수칙과 보험 보장내용을 안내하는 등 사전 예방 활동을 병행한다.

김은지 기자 eunzy@gwangnam.co.kr

전세사기 피해 4만명 돌파

40세 미만 청년층 75.9%

정부가 인정한 전세 사기 피해자가 4만 명을 돌파한 가운데 피해는 청년층과 전세 보증금 2억원 이하 주택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세 차례 개최한 결과, 모두 609건을 전세사기 피해자로 최종 인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심의에서는 신규 신청과 재신청을 포함한 563건이 새롭게 피해자로 인정됐으며, 이의신청을 통해 피해 사실이 추가 확인된 46건도 지원 대상으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2023년 6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 이후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누적 인원은 4만278명으로 늘었다.

피해 규모는 보증금 1억원 초과~2억원 이하가 43.4%로 가장 많았으며, 1억원 이하가 42.0%, 2억원 초과~3억원 이하가 12.3%를 차지했다. 전체 피해자의 97.6%가 보증금 3억원 이하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피해가 전체의 60.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대전 11.1%, 부산 10.1% 순으로 나타나 수도권과 일부 광역시에 피해가 집중된 것으로 분석됐다.

주택 유형별로는 다세대주택이 28.7%로 가장 많았고, 오피스텔 20.8%, 다가구 주택 18.5%, 아파트 13.3% 순이었다.

연령별로는 40세 미만 청년층이 전체 피해자의 75.9%를 차지해 사회초년생과 청년 세입자의 피해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전체 심의에서 피해 인정 비율은 59.6%였다. 반면 23.0%는 특별법상 피해 인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고, 10.1%는 최우선변제금 등을 통해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로 판단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한 피해주택 매입사업도 확대하고 있다.

LH는 현재까지 전세사기 피해주택 1만256가구를 매입했으며, 올해 1월부터 7월까지는 월평균 752가구를 매입하는 등 사업 속도를 높이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김은지 기자 eunzy@gwangnam.co.kr